

지식 경제 현안

■ 미국의 디지털 경제 현황(III)

- IT 산업의 발달은 고용 구조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
  - 우선 IT 관련 고용자 수는 미국 전체 고용자 수의 6.1%에 해당하는 740만 명 (1998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어났음
  - IT 관련 직종의 전체적인 고용 증가 속에서 고숙련 핵심 직종, 소프트웨어 및 통신 부문의 고용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과 같이 고용 내부 구조에서도 변화가 일어남
  
- ‘신경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인식이 미국 내에 확산되고 있음
  - ‘신경제’의 정착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낙관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음
  - 전후 두 번의 경기 확장기와는 달리 최근에는 경기 확장기의 노동생산성 접근, 인플레이션율 상승, 실질임금 증가율 상승과 같은 일반적인 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과거와는 다른 성장 궤도에 올라선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과 같은 효과에 역점을 두는 IT 투자의 성격상 설비 투자가 과잉 설비화되지 않고 재고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어, 향후 있을 수 있는 경기 수축기에도 급격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미국’에서 ‘신경제’가 가능했던 데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작용했음
  -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 지향적인 사회 분위기와 함께 자원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배분을 가능케 했던 노동 시장 및 금융 시스템이 존재했기 때문임
  - 향후 ‘신경제’의 바람직한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IT 산업의 파급 영향 등 신경제 현상에 대한 분석 틀의 개발, ‘디지털 격차’의 해소 등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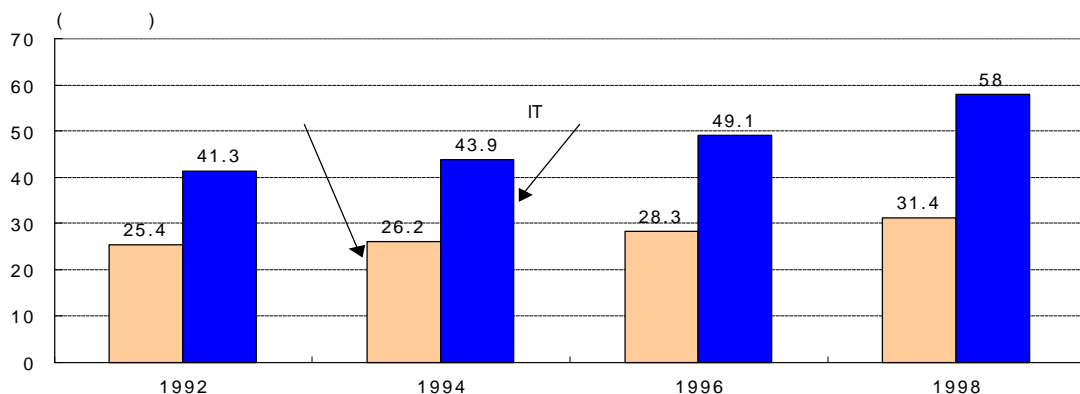
## 미국의 디지털 경제 현황(III)

이 글은 미국 상무성의 디지털 경제와 전자상거래에 관한 보고서, *The Emerging Digital Economy*(1998년 4월)의 제2 증보판인 *Digital Economy 2000*(2000년 6월)의 5~7장을 번역 정리한 것임. 여기에서는 IT 산업이 고용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른바 '신경제'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서 가지는 몇 가지 특징 및 '현재' '미국'에서 그것이 가능했던 사회·경제적인 조건들을 밝히고 있음

### □ 정보기술(IT)산업과 고용

- 디지털 경제의 발달과 더불어 IT 관련<sup>1)</sup> 고용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우선 IT 관련 고용자 수는 미국 전체 고용자 수의 6.1%에 해당하는 740만 명(1998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어났음
  - 1994~98년간 미국 전체의 비농업 고용 증가율이 11%였는데 비해, IT 생산 부문의 고용 증가율은 28%, 여타 부문의 IT 관련 직종 고용 증가율은 22%에 달했음
  - IT 관련 직종의 임금 수준은 전산업 평균 임금보다 높으며, 그 격차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 노동자 1인당 연간 임금 수준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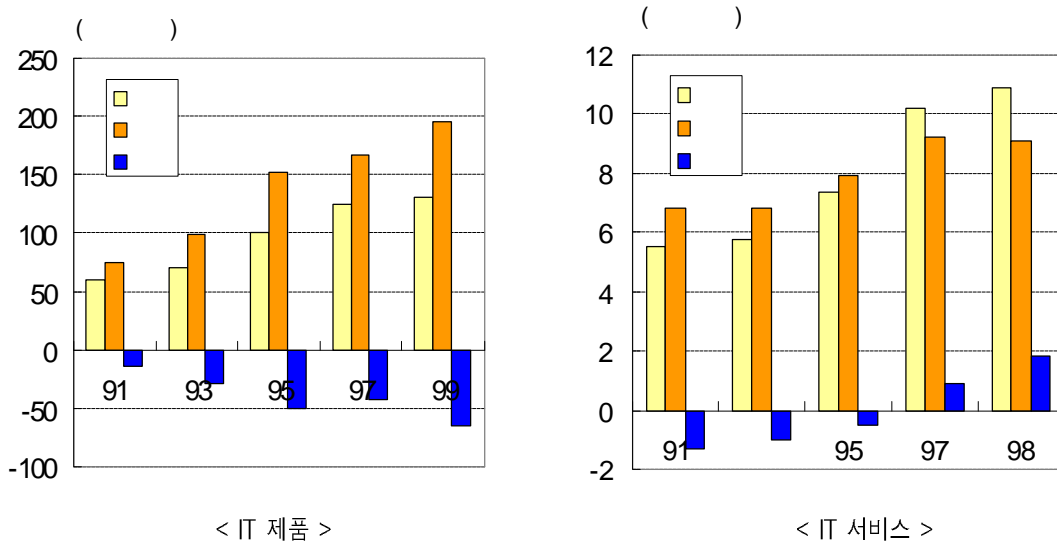
1)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신 등 IT 생산(IT-Producing) 부문과 다른 산업 부문의 IT 관련 직종을 모두 포함

- IT 관련 직종의 전체적인 고용 증가 속에서 프로그래머, 시스템 분석가 등 고속 관련 핵심 직종, 소프트웨어 및 통신 부문의 고용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과 같이 고용의 내부 구조에서도 변화가 일어남
- IT 관련 고용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
  - 현재 미국의 IT 직종 고용 시장이 심각한 수급 불균형 상태(수요 초과)에 놓여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향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및 민간 부문의 다각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
  - 연방 정부에서는 외국의 IT 인력 유입 원활화, IT 고용 시장의 정보화를 통한 수급 원활화 등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민간 부문도 IT 자본 장비율 제고, 온라인을 통한 IT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음

□ IT 부문 무역 동향

- 미국은 IT 부문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무역에서는 적자임
  - 최근 IT 제품의 교역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수입 증가율이 훨씬 높아 IT 제품 부문은 약 660억 달러(1999년 기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IT 서비스 부문(소프트웨어 로열티 등 포함)에서는 소규모 적자가 지속되다가 1997년부터는 소규모 흑자로 반전되었음(1998년 18억 달러 흑자)

< 미국의 IT 제품 및 서비스 교역 추이 >



- 미국이 IT 부문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데도 IT 부문(특히 IT 제품)에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 IT 업체들의 국외 판매가 해외 현지 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 ‘新경제’의 몇 가지 이슈

- ‘신경제’의 정착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낙관론이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음
  - 최근 미국 경제의 저물가·고성장 지속 현상 즉, ‘신경제’ 현상이 IT 혁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 점차 힘을 얻고 있음
  - 이와 함께 미국 경제는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성장 궤도로 들어섰으며, ‘신경제’ 현상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다양한 분석이 제시되고 있음
  - 매년 향후 10년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는 Blue Chip consensus도 지난 몇 년간 2.45~2.7%에 머물렀던 장기 전망치를 올해는 3.1%로 상향 조정했음
- 최근의 ‘신경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경기순환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 전후 두 번의 경기 확장기(1961~69, 1982~90)와는 달리 최근 확장기에서는 노동생산성 저하, 실질 경제성장률 하락, 인플레이션을 상승, 실질임금 증가율 상승, 이윤 증가율 하락 등에서 이른바 ‘노인병’(geriatric) 증상, 즉, 경기 확장기의 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 또한 일반적으로 경기 확장기의 설비 투자가 수축기에는 과잉 설비화되어 경기 수축을 더욱 촉진하는 것과는 달리, 최근 설비 투자의 핵심인 IT 투자는 생산능력 확대보다는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소비자 만족도 제고 등에 초점이 맞춰져 그 의미와 효과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음
  - 또한 IT 투자는 부품업체, 소비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재고 수준을 줄임으로써 급격한 경기 수축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게 함

- 왜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은 장기 호황이 지속되고 있는가?

- 우선, 1990년대에 들어서 연방 정부의 균형 재정 노력이 인플레이 억제 효과를 보았고, 통화 정책 당국도 저물가 지속에 주목하면서 통화 긴축 정책을 자제해 왔음
- 기술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발현에는 매우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전기에서 IT로의 기술적 패러다임 변화의 효과가 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발현되기 시작했다는 기술 중심적 분석도 제기되고 있음
-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는 것은 혁신 지향적인 시장 분위기인 바, 효율적이고 신속한 자원 배분을 가능케 하는 금융 시스템, 낮은 조세 부담, 노동 시장의 유연성, 위험 수용적인 기업가 정신(entrepreneurism)에 대한 존중 등이 그것임

- ‘신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보다 더 정밀한 분석 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

- 감가상각률이 높은 소프트웨어 등의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를 국민계정에 포함시킬 경우, GDP보다는 NDP(Net Domestic Product : GDP에서 감가상각분을 뺀 것)가 더 정확한 성장 지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 또한 IT 투자가 많은 일부 서비스 산업에서 노동생산성이 낮게 나타나는 문제(‘Productivity Puzzle’)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들 산업의 산출 등에 대한 보다 더 정밀하고 세분화된 측정 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함

-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문제는 향후 ‘신경제’의 바람직한 발전에 중요한 도전이 되고 있음

- 1998년 기준 미국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이 42%, 인터넷 접속률이 22%인 데 비해, 저소득·저학력의 대도시 흑인 및 히스패닉 가구는 각각 7%, 2%에 그칠 정도로 디지털 격차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 통합성, ‘네트워크 효과’가 큰 디지털화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신경제’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디지털 격차 해소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